

사이버테러범죄는 ↑, 경찰 검거는 ↓

작년 4천344건 발생, 검거 991건 검거율 21% 수사 인력, 광주·전남 6명 포함 109명 불과 이형석 “유관기관 간 공조 시스템 구축 필요”

최근 5년 사이 해킹·디도스·랜섬웨어 등 사이버테러범죄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경찰의 검거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을)이 2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천770건 수준이었던 사이버테러범죄는 2020년 작년 한 해 4천344건으로 발생량이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경찰의 검거건수는 1천47건에서 991건으로 오히려 감소해 검거율은 44.3%에서 21.0%

로 급락했다.

주로 인터넷 공급망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사이버테러범죄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각종 정보유출과 함께 막대한 금전적 피해까지 야기하고 있다.

실제 정보시스템을 마비시킨 뒤 이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피해의 경우 2018년 22건에서, 2019년 39건, 2020년 127건, 2021년(8월 기준) 55건 등으로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1건 당 평균



피해협상액도 2018년 4천878만원, 2019년 9천959만원, 2020년 1억8천246만원, 2021년 2억6천83만원으로 늘었다.

이처럼 사이버테러범죄와 그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전국 시·도경찰청의 사이버범죄 수사 인력은 ▲광주 3명 ▲전남 3명을 포함해 109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마저도 사이버테러범죄(정보통신망 침해범죄)뿐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사기, 금융범죄, 저작권), 불법컨텐츠범죄(사이버성폭력, 도박, 명예훼손, 스토킹) 등 모든 사이버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어 인력도 부족하고 경찰의 전문적인 수사역량이 범죄의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

적이다.

또한 사이버테러범죄의 특성상 단순히 경찰청의 수사력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아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등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대한민국의 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정보보호 및 그에 대한 국제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유기적 협조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형석 의원은 “사이버테러범죄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범죄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 검거율 제고를 위해서 경찰 인력 재배치와 과기부·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 기관과의 효율적인 공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여의도 클럽

윤재갑 ‘오토바이 굉음 방지법’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26일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굉음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배달 음식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야간 시간대 아파트 단지·골목길 등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토바이 굉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현행 오토바이 소음허용기준치는 배기소음 10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기차가 지나갈 때의 소음과 맞먹을 정도로 터무니없이 높은 것이어서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돌아다녀도 현행법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오토바이의 소음기·소음덜개를



폐어버리거나 굉음을 추가로 붙인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처벌 강도가 미미하여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토바이 소음허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낮추고, 소음기·소음덜개를 폐어버리거나 굉음을 추가로 붙여 적발된 경우, 과태료를 6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굉음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서·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野, 文대통령-이재명 만남에 “한몸 선언” 맹공

“추 보호지시와 다름바 없어” “몽개기 수사쇼’ 말고 특검”

국민의힘은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청와대 회동을 ‘잘못된 만남’이라고 몰아세우면서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청와대 만남이 여론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할 수 있는 선거 개입이며, 대장동 게이트의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이날 김기현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혐의자라 국민의힘이 고소·고발도 했는데, 대통령이 이 후보를 만나게 되면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 후보를 보호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검찰에) 사실상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장동 사업을 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황무성 전 사장)을 바꾸는데 시장 지시가 없었다는 말을 믿으라는 건가”라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곧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文(문)-재명’의 잘못된 만남’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두 사람의 만남은 ‘文-재명’, 즉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권의 계승자라는 것, 한 몸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정감사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등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의 대장동 비리 의혹 연루를 부각하기 위한 특검 공세 고삐도 바짝 죄었다.

김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서 ‘몽개기 수사쇼’를 하고 있다. 국민들은 진실을 보고 싶어 하니 특검을 하자”고 말했다.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YTN 라디오에서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유동규의 호주 여행 후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잘리고 화천대유가 설립되고 초과 이익환수 조항도 사라졌다”며 “작전은 호주 여행에서 짚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원 전 지사는 “대장동 뿐 아니라 백현동 관련 의혹도 수사요구서에 담아 제출했다”며 “이재명 선거본부장을 했던 김인섭이 등장하면서 백현동 사업도 민

간 100% 분양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박수영 의원도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페이스북 글에서 “임대 아파트 비율을 10%로 낮추고 90%를 일반분양으로 바꿔 (민간)에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을 이재명 당시 시장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범죄자들과 공모한 것”이라며 “양과 까듯 쏟아지는 비리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연합뉴스

野, 사실상 4지선다形 경쟁력 평가

洪측 요구에 무게 실은 듯...선관위 “반복 없다”

국민의힘 대선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여론조사 문항을 의결했다.

선관위 산하 여론조사 소위원회장인 성일종 의원은 브리핑에서 “만장일치로 본경선 여론조사 문항에 대해 의결했다”며 “가상대결을 전제로 해서 질문하고 본선 경쟁력을 묻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세부 문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선관위가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문구를 결정했다”며 “문구는 실무선에서 작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본선 경쟁력’을 질문을 받은 응답자가 국민의힘 대권주자 4명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장한 ‘가상 양자대결’보다는 홍준표 의원이 요구한 ‘4지선

다’에 가까운 방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테면 “이재명과 원희룡, 이재명과 홍준표 후보(가나다 순)가 대결한다. 이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1번 원희룡, 2번 유승민, 3번 윤석열, 4번 홍준표 중 고르시오”라는 식이다.

외경상으로는 윤 전 총장과 홍 의원 주장을 반영한 ‘절충안’이지만, 사실상 홍 의원이 요구한 4지 선다형에 무게를 둔 셈이다.

성일종 소위원장 “선거 후에도 국민의 정권교체 여망을 받들어서 하나의 단일대오를 만들어 ‘원팀’으로 가야하므로 이 정신에 가장 적합하도록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일부 후보들의 이의제기 가능성에 대해선 “이의 제기 안 할 걸로 보여진다. 다 의견 수렴을 했다”며 “선관위 결정은 반복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유영민 “대장동 의혹, 굉장히 비상식적”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도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유 실장은 이번 사건이 부동산 개발 관련 비리 의혹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가장 아픈 곳이기도 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